

“건설현장에 인공지능 도입 무재해·무사고 원년으로”

김윤덕 국토부장관,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서… “더 안전한 현장 되길”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내 및 도내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안전을 최고의 핵심으로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엑스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스마트혁신기술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더 안전한 현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2025 스마트건설·

안전·AI 엑스포 “건설현장에 AI 스마트혁신기술이 도입되면 안전문제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AI 발전 속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시도와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미국 뉴욕 맨해튼 사진을 보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기간이 12~13년 남짓했는데 현재는 (혁신기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

며 “건설산업에도 AI를 매개로 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가 AI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건설분야에서도 스마트혁신기술을 기반으로 AI고속도로를 활용해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 혁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권희성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책 플랫폼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 출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주도
교통·물류·도시계획 등
익산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나서기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인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5일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이사장 최정호)’은 전남 영광대학교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정호 이사장을 비롯한 포럼 회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원종 영화배우, 지역 인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및 축사, 포럼 영상 상영, 발대 선언, 특강, 질의응답 및 정책제안, 기념 퍼포먼스 - ‘하늘로의 비상’ 등이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은 축사에서 “최 이사장의 분석력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을 믿는다”며 “최 이사장이 익산의 미래 비전을 그려 나가는 것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종 영화배우는 “최정호 이사장은 강력한 성품과 정책능력, 소통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며 “익산국토교통미래포럼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익산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특강을 통해 “최 이사장은 이제껏 정부의 과제 중 균형 발전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다익산이라는 이



최정호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 이사장(사진 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배우 이원종씨 등이 출범식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름을 선물로 드리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은 국토교통·도시경영 전문가인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고 각 분야 정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교통·물류,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청년·일자리, 문화 관광, 농업, 교육 등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 물류 허브,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도로·철도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 자율주행 및 통합교통서비스 망(MaaS) 등 ‘익산 미래형 교통·물류 허브 구축’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2 혁신도시와 연계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물류·교통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AI·디지털 창업 생태계 조성 △기후 변화 대응과 도시 회복력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정호 이사장은 “호남의 교통 요충지인 익산은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스마트 교통·물류 중추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익산을 전북권 광역 교통·산업·문화 융합의 거점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망성면 출신의 최정호 전 차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전북도 정부부지사,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권희성 기자

도의회 문안위, 올 행감
내년 예산 심사 대비 연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5일 부안군 일원에서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북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자료 사전분석과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각 실국별 내년 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행정사무감사 정점사항 및 질의 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심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선8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년간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부 논공 재배면적 감축 논의, 농민에 대한 배신”

김동구 도의원 “즉각 철회를”…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정부의 논공 재배면적 감축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책 철회와 함께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공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논공 재배면적을 2021년 4,910ha에서 2025년 약 1만9,000ha로 확대해 전국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에 전북 농가가 적극 호응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만호 기자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논공 재배면적 확대는 농민들의 땀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성과”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성실히 협력해 온 농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논공 재배면적 감축 논의 즉각 철회 및 중장기 전략작물 재배계획을 수립 △논공 희망량 전량 수매 약속 이행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매물량을 우선 배정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의 농업인들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과 확실한 지원으로 그 노력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형 복지안전망’ 제도적 기반 마련

강동화 도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안 발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지사 책무 강화·생계비 등 실질적 지원항목 명문화 등 조례안에 담겨

우리 지역 익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힘없는 모녀가 자살하는 비극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별써 도민들의 뇌리에 잊혀지려고 하는 즈음 한 도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빛을 발하며 돋보인다.

정치의 요체가 힘없는 서민들의 도움을 주어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상생사회가 되는 것이 요체인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바로 강동화 의원이다.

도의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누구도 복



지의 그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북형 복지안전망’을 제도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동화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수급권자 등 법정 지원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가구가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책무 강화 △생계비, 의료비, 임시거처,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등 실질적 지원항목 명문화 △전북

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군,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전북형 긴급복지사업’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예산운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는 시·군 및 민간 구호기관과의 정보연계, 현장조사를 통해 누락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복지체계를 보완하면서도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실효성 높은 복지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화 의원은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제도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

민노총 전북, 전북도에 촉구

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인수 수석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 이민경 본부장, 김래형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군산의료원지부장, 채현주 돌봄서비스노조 전북지부장, 김선희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희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실제 행정으로 옮길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그동안 전북도와 노정협의를 통해 노동전담부서 신설, 인력 확충 논의, 노동인식 개선 홍보사업 예산 반영, 노동복지관 건립 추진, 산업안전 지킴이 사업 확대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료원 재정난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부담이 커지며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4년간 매년 30억원의 손실보전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매년 14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군산의료원과 진안의료원에는 단 한 톨의 지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이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성과였지만,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내년 예산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반영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지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북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